

# “양돈업 확실한 지원과 법률적 보장대책 마련해야”

‘축산 생존전략 모색 대토론회’ 서 단체장 한목소리



▲ 지난 4월 16일 '축산 생존전략' 대토론회에서 김동환 양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지도자들이 한미FTA 타결에 따른 정부대책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350여명의 축산인들이 참석, 한미FTA 타결에 따른 축산인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시켜 줬다.

- 홍 보 부 -

지난 4월 16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한·미 FTA 타결 축산분야 생존전략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한미FTA 타결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충격이 예상외로 커 중장기 대책에 앞서 축산농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률적 지원 보장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한·미 FTA에 앞서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최소한의 시장보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 5년내 국내 양돈업이 FTA 경쟁국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과 FTA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시 법률적 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줄 것 다주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양돈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산업에 임할 수 있도록 분노처리, 사료값, 소모성질환 문제 등의 해결에 정부가 확실한 정책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정부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 축산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송아지 안정제 기준가격 상향조정 등 선언적 의미의 단기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피해에 대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전국 단일쿼터제 등이 조기에 실시되지 않을 경우 낙농 산업도 순식간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장 축산인들은 청중 토론을 통해 이번 한미 FTA협상 타결은 ‘선대책 후 타결’이라는 축산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만큼 원천 무효화 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장의 지정석을 1백여석을 초과하는 3백50여명의 축산인들이 참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축산인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 축산이 중심이 되는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편 홍문표 의원(한나라, 홍성·예산)은 “FTA는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꾸는 협상”이라며 축산의 피해가 바탕이 된 협상임을 지적하고, 그동안 쌀 위주의 농정을 축산이 중심이 되는 농정으로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농림부축산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에 따른 정부대책 발표를 통해 FTA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축산 등 사육이 곤란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돼지의 경우 환·배기 및 분노처리시설 현대화 등으로 질병발생을 억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량종돈 선발을 통해 고품질 돈육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자연순환농업 정착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축산인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협상 결과를 안겨줘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축산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돈**



▲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여러가지 양돈 현안 해결에 정부가 확실한 정책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